

광주시 자율주행 특수차량 규제자유특구 추진

이용섭 시장, 대통령-시도지사 부산 간담회서 건의 정부 2차 자유특구 8월 공고 12월 대상지 발표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닥친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을 돌파할 열쇠로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간담회가 24일 부산에서 개최됐다.

문 대통령은 비롯한 시도지사, 정부 관계자들은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24일 부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된 7개 시·도의 산업 부스를 관람하고, 향후 규제자유특구를 포함한 지역혁신성장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에서는 영광·목포·신안 일대가 'e-모빌리티 산업'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신사업진출 기회가 폭넓게 보장되고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자율주행기반 특수목적차량 공공서비스 실증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올 하반기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는 광주시가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광주시의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노면정소, 폐기물 수거, 전신주 고소작업, 도로상황 점검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특수목적차량의 자율주행차 운영을 실증하는 것"이라며 "도로교통법, 도로법, 개

인정보처리법 등 18개 법에서 규정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버스-승용차 등 일반 수송차량에 대한 자율주행차 사업은 이미 국내외 여러 곳에서 추진 중이나 특수목적차는 광주가 선도적으로 특화할만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저속주행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위험성이 적고 사업성이 크다"며 "광주시는 관련산업 생태계 역시 잘 갖춰졌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에너지신산업, 친환경자동차(자율주행기반 특수목적차량 실증사업), 인공지능(AI) 등 3개 신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1차 규제자유특구지정을 노렸으나 탈락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전남의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 중 '블루 트랜스포트'를 언급하며 후속조치의 하나로 "e-모빌리티산업의 R&D 지원 등을 통해 현재 40%에도 못 미치는 부품 국산화율을 '20년까지 80%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차 선정에 누락된 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거쳐 8월께 2차 규제자유특구 공고를 낸 다음 12월께 선정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간담회에서 "2차(자유특구) 지정에 가급적 서둘러 달라. 이번엔 제외된 지역이 상실감을 느낄 수 있고 내년 예산반영 문제도 걸렸다"며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지역 인프라를 충당하는 것은 물론 중앙 부처에서도 컨설팅을 잘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시도지사들은 총회에서 지방분권 등 주요안건 협의와 함께 김영록 지사의 제안으로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폐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및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촉구안을 채택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참석자들과 대화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아파트 용지 전환 대가 242억 뿐

학교법인, 내년초 분양·착공

광주 도심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 97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건립될 전망이다.

호남대 학교법인 측이 유류부지로 남아있는 쌍촌캠퍼스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242억원 상당의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했고, 광주시가 이를 받아들여 학교시설(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 의사를 밝히면서다. 학교 용지로 묶여있던 부지가 아파트 건립 가능 용지로 변해 가치가 치솟는데 비해 공공기여 규모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전문가들 일각에서 나온다. 학교법인 측은 연내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얻어 내년초 분양과 함께 착공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 대해 학교법인 성인학원과 2년에 걸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24일 밝혔다.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는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 6만 4116㎡ 규모다. 지난 2015년 3월 광산캠퍼스로 통합 이전 후 유류부지로 남았다.

협상 과정에서 학교법인 측이 광주시 에 242억원을 공공기여로 제공한다는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조만간 도시계획 시설(학교) 결정을 폐지하게 된다. 학교법인 측이 광주시와 합의한 공공기여 내용은 크게 2가지다.

학교법인 측은 장기미집행시설인 온천근린공원과 화정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205억원을 현금으로 광주시 에 제공한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학교법인 측이 '아파트착공 이전' 또는 '아파트 건립 사업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가운데 빠른 일자를 선택해 직접 광주시 에 입금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학교법인 측은 37억원을 들여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경로당 등 공공기반시설도 확충하기로 약속했다.

양측 협상에 관여했던 한 도시계획전문가는 "논의 과정에서 공공기여분이 일반 시민이 생각하기에도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었다"고 전했다.

광주시와 학교법인 측은 공공기여방안 협의는 지난 2017년 3월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가 마련된 이후 협상단계에 올린 첫 사례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공공이 큰 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민간이 수립한 개발 계획안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의·조정해 공공성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학교법인 측은 쌍촌캠퍼스 부지에 97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 사업을 직접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층수는 10~36층, 실별 면적은 84~170㎡ 규모로 전해졌으나 광주시 건축심사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10년간 4000억 투입 섬 숲 3000ha 복원

생태복원사업 최종용역 마무리

전남도가 서남해안 섬의 숲 3000여ha를 복원하는데 10년간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민선 7기가 내건 전남의 새로운 비전인 '블루 이코노미' 전략에 따라 전남의 블루자원의 섬, 해양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24일 "서남해를 둘러싼 섬 지역에 초록 방패숲을 조성해 미세먼지 저감과 훼손된 경관 복원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최종용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서남해안권에 조성되는 숲은 남미의 아마존과 같은 한반도 허브숲 역할과 남도의 섬, 해안, 갯벌 등 우수한 자연경관과 어울려 다도해권을 미래의 세계적인 관광

지로 명소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 따라 전남도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64개소에 3000여ha의 숲을 영광군부터 광양시까지 15개 시·군과 함께 조성하게 된다. 투입 예산은 4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세계 최초 섬의 날 제정 등 섬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전남에는 전국 65%의 섬이 산재해 있다. 전남도는 3개 권역으로 나눠 섬의 역사·문화·생태 등을 반영한 테마 섬숲 조성과 기존의 훼손된 숲을 복원할 예정이다. '다도해권'에는 신안군을 중심으로 사계절 꽃피는 숲을 조성해 2025년 꽃섬 축제를 개최하고,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을 중심으로 한 '남도문화권'에는 남도의 삶이 담긴 숲을 조성한다. 여수시, 광양시를 중심으로 '한려수도권'

에는 해양레포츠 숲을 조성하고, 신안 하의도에는 동북아 화합을 상징하는 '한반도 평화의 숲'을 만들기로 했다.

전남도는 올해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소관부처인 산림청에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또 향후 100년을 목표로 난대림 복원기술을 정립하고 섬별 향토 수종, 훼손된 산림현황 등 산림자원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서남해안은 동북아의 중심이자 유라시아 대륙의 기점이며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관문으로 섬, 갯벌, 해안 등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다"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섬, 해안면에 다양한 테마의 섬숲을 조성해 해양 관광사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국립 섬 발전연구원 설립·유치 전남도,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전남도가 국립 섬 발전연구원 설립·유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립 섬 발전연구원은 섬에 특화된 정책 개발 및 연구 기능을 수행하면서 섬의 발전과 그로 인한 국가경쟁력 증진,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맡을 전문연구기관이다.

전남도는 24일 "23일 섬 관련 전문가와 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 섬 발전연구원 설립·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도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섬 현황 및 환경 분석 ▲섬 발전연구원 설립 필요성 및 기대효과 ▲섬 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방안 등을 과업으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실질적 관광대책 시급

문체부 '2018 국민여행조사' 여행객 가장 적게 찾는 곳 3위

지난해 우리 국민이 가장 적게 찾았던 여행 방문지로 광주와 세종, 울산이 꼽혔다. 광주는 1인 평균 국내여행 지출액도 1만2000원 수준에 불과했다. 말 뿐인 관광 활성화가 아닌,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4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공동으로 조사한 '2018년 국민여행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여행 방문지로 가장 적게 선택된 지역은 세종(0.5%), 울산(1.4%), 광주(1.5%)로 집계됐다. 반면, 강원(15.4%), 경기(13.5%), 경남(11.2%), 전남(10.0%) 등은 국민이 많은 찾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만 15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매월 여행 행태를 파악한 조사 결과, 대상의 89.2%가 국내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여행 횟수 총량은 3억1115만회로, 국민 1인당 평균은 6.9회였다. 여행지별 1회 평균 국내여행일수는 제주(3.25일), 부산(2.06일), 강원(2.02일) 등의 순으로 높았다.

1인당 평균 국내여행 지출액은 95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강원지역에서 15만6000원, 제주(13만3000원), 전남(8만9000원) 등에서 많이 썼다. 광주(1만2000원), 울산(9000원), 세종(3000원) 등에서는 쓰임새가 적었다.

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이유(중복응답)로는 '시간이 없어서'라는 답이 6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 친구와 시간을 맞추기 힘들어서'(43.1%), '함께 여행할 사람이 없어서'(18.6%), '여행 경비 부족'(16.5%), '건강상의 문제'(14.7%)라는 반응도 많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